

논술강의(2.27,토)

☐ 핵심주제

1. 현정부의 안보정책(총괄)

2. 포괄적 안보위협 대비 / 예상문제풀이

☐ 강의시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교시(09:30~10:40)	최근5개년 출제경향 분석 · 21년 상반기 출제 예상(진단) · 포스트코로나와 바이든시대 국제질서	유인물
2교시(10:50~11:50)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분석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미중패권경쟁	유인물
중식(12:00~13:20)		
3교시(13:20~14:20)	포괄적안보위협(1) ·안보위협개념 및 유형	논술교재
4교시(14:30~15:20)	포괄적안보위협(1) ·테러 및 사이버테러 ·지구온난화와 자연재난	
5교시(15:30~16:50)	비전통적안보위협(1) ·전통적 안보위협 대비 ※ 모의고사 문제 / 풀이	

제 1 교시

(09:30~10:40)

- # 1. 최신 출제경향 및 21년 상반기 출제 예상(진단)
- # 2.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新국제질서

#1-1. 최근 5개년 출제경향 분석

1. 최근 5개년 논술문제 출제 경향 분석

- 가. 16상, 북한핵실험과 군사도발, 위기관리/ 북한급변사태, 사드배치 외교전략
-16하,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국가 개입양상, 트럼프행정부 한·미동맹 변화가능성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미·중 갈등양상과 우리정부 대응방안
- 나. 17상, 북한 사이버 테러의 유형과 심각성, 대응/ 비상대비 태세와 기관간 협력방안
*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특징과 변화가능성/북·중관계 협력과 갈등양상
-17하, 국가위기의유형과 발생원인, 구조적 특성/북핵도발시 위기관리단계별 활동
*중국의 해양력 강화정책과 우리대응/북핵문제에 미국대응과 한반도 영향
- 라. 18상, 국가재난의 종류와 위기관리 거버넌스/비상대피시설구축, 평시활용
*본인지원한 기관,업체의 대비태세특징과 위기상황발생시 실질적인 대응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신(新)북방정책과 협력증진 방안
-18하, 초연결사회특성, 위기유형, 대응/KT화재 통신망붕괴 문제점
*지원한 기관 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비상대비태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 주도능력향상/우리군 대응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변국들과 관계변화
- 마. 19상,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기인한 재난, 위기유형과 통합 위기관리시스템
* (19.4.4)강원도 산불진압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 본인 지원 기관/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종류와 대비
-국가비상사태시 위기관리상호 협력방안/예상치 못한 테러발생시 실질적 대응
- 바. 19하, 국가위기관리체계 활동상 예방, 대비, 대응과 복구라는 측면 대량난민
* 대량난민이 초래할수있는 국내적 부정적결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 북한 대량난민과 다른 국가로부터 대량 난민간 차이점
-국가사이버안보 6대전략과제중 주요 전략과제인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와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사례 기술, 우리 효과적 대응방안
- 사. 20상, 글로벌 보건안보의 관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응능력
* 감염병 레짐의 성격을 설명하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과정, 발병국
국가 위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
- 상시적 재난관리, 정부와 민간 효과적 협력위한 재난정보·통신전략에 요건
*산불발생시 소셜미디어의 장단점과 정부차원의 개선책(호주와 강원도산불)
*사회적 재난이 확대되어 국가적 재난 또는 국제적 재난으로 전개된 사례
- 아. 20하, 안보딜레마 개념, 중국 사이버 안보강화가 미·중간 사이버 안보딜레마
*사이버 안보와 네트워크 보안 차이
-동일본 대지진발생 가정 재난관리 4단계에 근거해서 각 단계별 대응
*이재민이 발생시 민간/정부차원의 이재민 구호활동과 민·관 협력 구호체계

#1-2. 최신 논술 출제경향

가. 현 위기관리 상황평가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지방1.5)
-백신과 치료제 관련 국제적 갈등→ 접종우선순위, 저개발국가 등
2.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국제관계 변화(미중패권, 동맹복원, 중국압박)
3.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강진(진도 7.3)→ 국내 지진발생 피해 우려
4.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및 한미 동맹복원(방위비협상, 연합훈련 등)
5.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주주의 항쟁
6. 국제적 기후변화와 재난피해 증가(폭설, 한파, 대형산불) / 온난화 등
7. 북한의 사이버테러 및 공격활동 강화(비트코인, 백신해킹 등)

나. 최근 5개년 출제 문제를 분석한 논술(예상)

1. 북한의 핵개발위협(핵잠수함, 핵무기(다종화), 장거리미사일개발 등)
2.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이후 한미동맹, 북핵문제, 미중갈등 문제
3.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백신) 안보전략
4. 포괄적 재난대응(기후변화, 지진피해, 원자력안전, 해양사고, 산불피해)
5.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반도 주변 국가와 관계변화
6. 한반도 신평화체계 구축과 신북방(남방)정책
7. 이란선박납치와 국제테러리즘, 북한 사이버공격과 대응

다. 세부 주요내용

1. 북한의 핵개발 위협

가. 북한 김정은 핵잠수함 개발 공식 선언(1.6일 노동신문)

*3000톤급 SLBM탑재 가능한 잠수함 건조완료(추정)

*핵잠수함 개발위한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 강화 예상

나. 군사위성개발과 무인기개발, 장거리 타력능력제고

*바이든행정부 출범과 북미 협상시 유리한 조건 선점 위한 포석차원

*북한 핵보유국 지위와 미국과 대등한 핵협상 등 전략

2. 미국 바이든 新행정부 출범이후 국제관계 변화 및 미중패권 경쟁

가. 전통적 우방과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나. 중국압박과 견제위한 정책은 지속,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 확보
다. 실무협상 중심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일 공조와 중국동참 추진

3. 코로나19 국제적 3~4차 피해 확산과 백신(치료제) 갈등

가. 전 세계적 3~4차 피해 확산 및 바이러스 변종(영국,남아공,브라질)
나. 글로벌 보건안보 차원, 백신접종 및 치료제 무기화 경쟁 / 갈등
다. 경제적 피해 폭증 및 사회적 기회비용 폭발적 증가

4. 포괄적 재난대응과 기후변화 등 재난관련 위기관리 분야

가. 세계적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인한 재난 피해 증가
-예측과 대비곤란, 피해의 대형화, 초국가적 대응 필요성 증대 등
-최근 미국이 이례적 한파피해 발생
* 미국 본토 4분의 3이 눈으로 뒤덮여 교통이 마비되고 수백만가구가 정전피해, 한파로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규모의 폭설과 한파피해(기상청 북극소용돌이 한파가 급남하원인)
나. 포괄적 재난대응과 국가위기관리 체계적용 : 미국(DHS),일본(DMAT)
-예방적 측면에서의 맞춤형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
-최근 동일본 진도 7.2의 강진 재발생, 한반도지진 발생 위험증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최근 지진발생빈도 증가)
다. 글로벌 초국가적 新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방안 강구 : 공동대응

5. 한반도 주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가.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 남북평화정책, 북핵, 평화협정 등
- 한반도평화체계 정착위한 북미대화 재계 노력
- 남북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남북대화 단절
*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살과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
나. 미·중패권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新냉전구도
- 한반도 외교정책과 선택적 강요 / 미·중 신냉전
다. 북한 핵무력 증강에 따른 우리의 실현적 국가안보전략 변화
-핵개발억지전략, 폐기전략, 한국식 핵보유전환(나토식,전술핵) 등

- 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및 한국군 독자적 방위역량 확대제한
-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지휘소연습), 임기내 전환추진 등 다수제한
 - 미측 한반도 전환요건 미충족(한반도지역안정과 북한핵능력 대응 등 부족)
- ※19년 기본운용능력 검증 , 20년 완전운용능력, 21년 완전임무수행

6. 한반도 신평화체계 구축과 신북방(남방)정책

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란 단순히 경제구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결국 정치군사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신평화지도로 확장

나. **신남방정책**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

라. 북방정책

북방 정책(北方政策)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수립한 대한민국의 대공산권 정책이다.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정책에 따라 1990년 6월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연방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그 해 10월 소련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듬해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 또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주요 적성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 환경조성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활용해,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함

마.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구상, 그리고 몽골의 ‘초원의 길이니셔티브’ 등 주변 국가들의 대외경제 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한국에 경제 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 균형외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7. 이란선박납치와 국제테러리즘

가. 배경: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이란핵합의(JCPOA)에 문제 많이라며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도입한 바 있다. 관련 여파로 이란 원유대금을 주고받던 한국 시중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나. 상황 : 2021년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을 불법 납포, 관련 선원에 대해 억류발표

다. 원인 :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한국은행이 미국 금융제재에 포함되어 이란과의 금융거래 금지,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 대금 약 7조원 동결되어 이를 환전 받기 위해 한국 선박을 불법 납포함

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JCPOA 복귀를 시사해오긴 했지만, ‘이란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있어 양국이 조만간 손을 맞잡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 도입 이후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는 등 합의를 어기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란 정부가 대미 강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란에 강경한 야당(공화당) 입장을 고려해야 해 양국 이견이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마. 이란의 핵협상과 북한핵협상 차이

가. 이란 핵협정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5.7.14)

- 2015sus 7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가한 협정(오스트리아 빈)
-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국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
- 이 협정은 2016년 1월부 발효되어 이란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을 모색해 왔음
-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나. 이란핵과 북한핵 비교

- 1) 이란은 우라늄 농축단계이나 북한은 자칭 핵보유국(완성)
 - 이란은 아직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단계이나
 - * 북한은 이미 수십기의 핵탄두를 개발 및 완성한 단계임.
 - 이란은 현 수준에서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핵 개발 관련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나, 북한은 이미 만들어진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임
- 2) 이란은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반면 북한은 외부지원이 절실한 상황
 - 이란 북한 공히 국제적인 경제제재 하에 놓여 있으나 이란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제한적 이나마 버틸 수 있음. 북한은 외부의 경제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 해야 함(중국카드를 버리지 못함)
- 3) 이란은 미국에 현존하는 위협이나 북한은 미국에 잠재적 위협
 -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부터 직간접인 적대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임.
 - 현재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항한 전쟁을 수행중이나 북한은 직간접으로 미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임.

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이유(분석)

- 1) 미국에 대항는 반미정책과 적대행위 지속
 - 반미와 적대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유임. 미국은 이란의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여 이란의 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하면 이를 이용하여 중동지역에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식하도록 유도하였음. 그러나 시리아 내전과 예멘 등에서 미국에 직간접적인 군사행동을 계속하며 대미 적대행위가 전혀 줄지 않고 늘어남.
- 2) 이란과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차단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서방국가가 이란에 투자하며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나토의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자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동맹국들이 이익을 챙기며 이란과의 관계가 밀접해 지는 것을 묵임 할 수 없음
- 3)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밀착 차단.
 -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중요함.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수입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수입도 늘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코자 함.
 - * 미국은 패권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흘러가는 에너지자원을 통제 해야함.

4) 미국의 협상카드와 북한에 대한 경고

- 미국이 이란핵합의 파기를 선언한 시기는 북미 핵협상으로 언론이 뜨거워진 시기이며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함
- 미국은 이러한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과거의 협상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며 북한도 미국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란 핵협상과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임.

5) 이스라엘의 이란 핵협상 파기 압박

- 이스라엘은 이란핵합의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 왔음. 이스라엘은 이란내에 핵과학자 암살 및 미사일공장 파괴 등의 테러활동을 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음.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구와 유대인사위 큐수너의 요청에 이스라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임

#2.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의 新국제질서

I. 서론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예측조차 어렵다. 백신개발 보급 일정이 보도되고 있으나 대량 생산과 성공적 접종 여부도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변이 발생이 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속성상 변이 또는 변종이 출현하고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빈번하고 일상화 되는 현실, 소위 위드코로나(With Corona)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지 모른다.

II. 본론

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질서변화

세계화와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 의심화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갈등을 억제하고 분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향후 국가들이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에 대비해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제적 교류를 통제 축소한다면 이 같은 메 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코로나19의 충격은 국제질서의 전반적 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의 근간이 된 세계화와 빈번한 교류가 원인이 되어 그 충격파가 확대된 현상이다.

둘째,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역시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충격은 과거 경제위기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팬데믹이 거팬데믹(Hunger Pandemic), 즉 경제침체와 함께 식량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체제 위기를 맞이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쟁이 지역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리전(proxy war) 양상을 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각 지역에 실패 국가가 출현하고 내전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져 지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전 세계를 배경으로 만일 이러한 무력사태가 발생한다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수년에 걸쳐 국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19의 충격을 배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 미국 조바이든 신행정부하 미·중관계와 세계질서

2021년의 미국 조바이든 신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미 중 관계의 전개 양상이다. 2020년 미 대선은 미국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의 방향을 결정할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식 대중국 공세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중전략은 즉흥적이며 잘 짜인 전략 아래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오바마 2기와의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2기 후반부터 민주당내에서도 이미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화된 국제무역질서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계속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념과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세력은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주의화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민주화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도파 개혁론자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복고론자가 중심에 서되 진보세력과 개혁론자들이 요구하는 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되 파국적 충돌은 피하는 접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대중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적 신전략개념과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구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공세로부터 한숨을 돌릴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이기간 중국역시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보다 체계적이고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는 줄이고 내수경제에 의존하는 체질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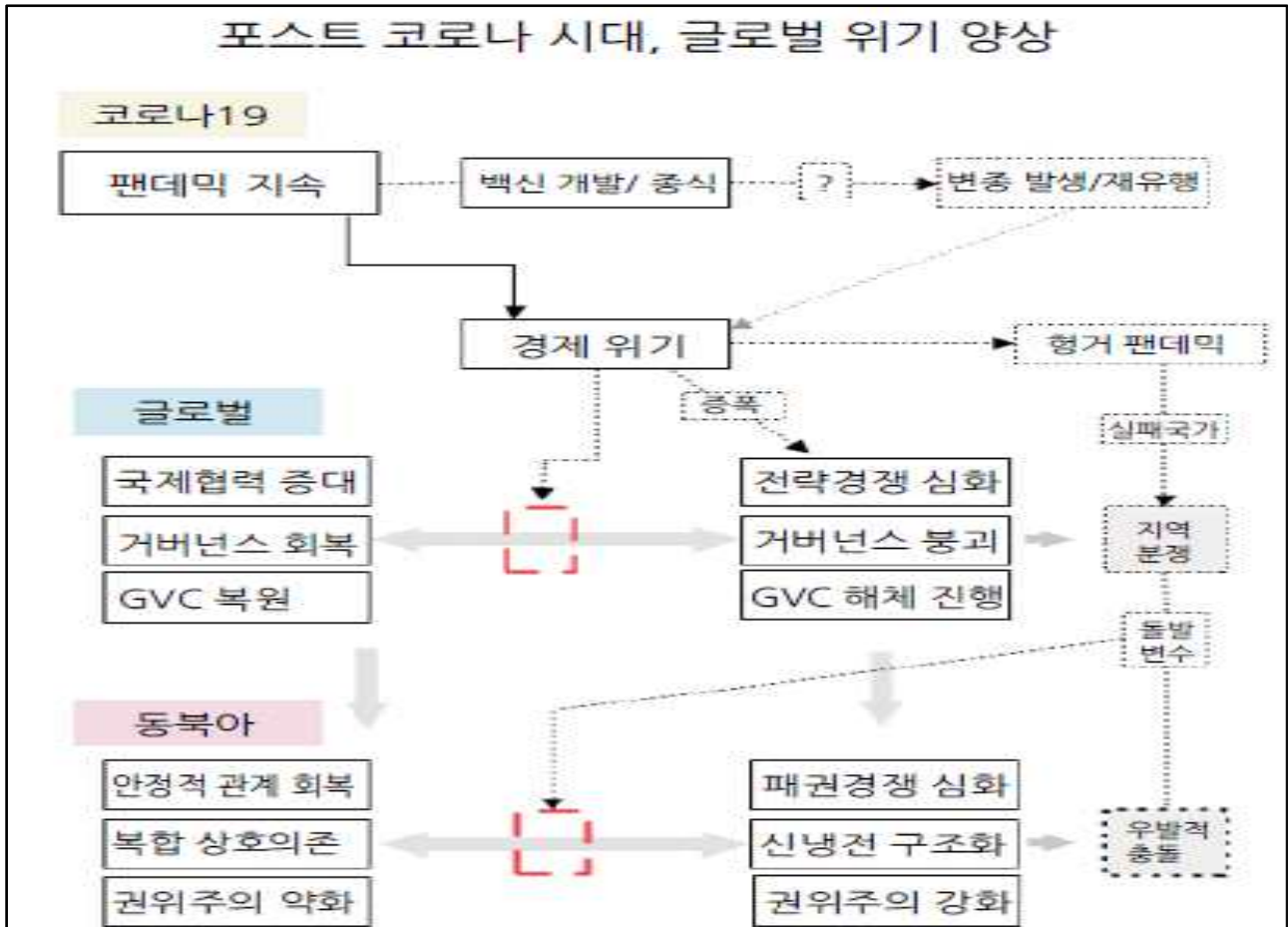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바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수위는 다소 경감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달라진 정책은 환영할 것이다. 다만 인권문제와 관련한 민주당 내 진보세력의 문제 제기가 강화될 전망이며 그로 인한 미 중 간 대치와 갈등이 악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 외에도 첨단 기술분야 경쟁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코로나19의 충격과 미 중 관계 재편은 각지역 질서의 연쇄적 재편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미 중 간 긴장이 높은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질서 재편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유럽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별 대응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GVC(Global Value Chain)

III. 결 론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지를 강화하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대서양협력(trans-Atlantic cooperation)을 복원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역할 강화 요구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민주당의 전통적 러시아 때리기 및 NATO와의 관계 강화와 중국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필요성 사이의 저울질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중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극단적 갈등을 피하면서 일부 협력도 추구하겠지만, 미국주도 신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불허하고 중장기적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한치의 양

보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동중국해는 여전히 미 중 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지속하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의 주한 주일미군에 편중된 역내 주둔태세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며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일정한 수정을 거칠 가능성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한반도 지역안보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안보논단

제 2 교시

(10:50~11:50)

1. 미얀마 군부 쿠테타와 미·중 패권경쟁

2.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분석

#1. 미얀마 쿠데타와 美·中 패권경쟁

I. 서론

미얀마는 1962년 1차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53년만인 2015년에 완전한 민정이 자리잡은 이후 또 다시 2021년 2월 1일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미얀마 내부의 민주주의의 후퇴도 문제지만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약 2천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의 쿠데타는 일대일로를 통해서 인도양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중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II. 본론

가. 미얀마 쿠데타 원인

1. '20년 총선(11.8)에서 참패한 군부세력 → 정국의 주도권 완전 상실

- 가) 아웅산 수치의 민족주의민족동맹(NLD), 상·하원 664석 중 59.6%인 396석 차지
- 나) 군부 출신으로 구성된 제1야당 통합단결발전당(USDP)가 양원 합계 33석 차지
- * 군부에 할당된 166석을 합쳐도 199석(30%)로 의회 결정권 완전 상실

다) 군부, 860만 유권자가 문제가 있었다고 선거부정의혹 제기→ 선관위무혐의 판정

라) 군부, 이에 불복하고 쿠데타 암시 → 서방 외교관의 만류로 주저 → 이틀 후 쿠데타

2. 총사령관 민 아웅 홀라잉('56년생, 65세) 등 군부지도자의 정치적 불안감

- 가)'11년 국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올해 2번째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 예정
- 나)'15년 총선 이후 아웅산 수치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군부의 영향력 행사
- 다) '20년들어 문민정부와 군부와의 의사소통 부족⇒민아웅 홀라잉 불안감자극

* 아웅산 수치, 최근 1년간 총사령관과 대면 회피..군부 영향력 축소 노력(NYT, 2.1.)

3. 군부에 대한 미얀마 국민 지지의 지속적 감소

- 가) 지속적인 국민지지 감소가 향후 헌법상 프리미엄인 군부 166석 확보 위협할 상황
- ⇒ '15년 민정이양 시 예상했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는 사라질 전망
- ※ 군부와 군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 지속화 '20년 총선에서 확인

나. 미얀마 쿠데타 중간 평가 : 비교적 성공적

1. 쿠데타에 반대하는 무력충돌 없이 비상사태 돌입

가) 군부내 反쿠데타 세력 없이 군부내 쿠데타에 대한 일치된 행동 보여줌

2. 내부 안정 유지

가) 조기에 교통 통신 은행업무 재개

나) 수지여사와 대통령 등 고위직 제외한 정치인(NLD 소속) 400명 구금 해제

3. 시민들의 反쿠데타 저항 미미

가) 쿠데타 4일만에 일부도시에서만 반쿠데타 시위, 차량경적·미비한 수준 저항

4.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국제적인 쿠데타 규탄 세력 미미

가) 中·러의 간섭으로 UN 안보리 성명도 쿠데타 규탄 내용 제외

나) 인접한 아시아 각국 스트롱맨 리더십 등 영향으로 미얀마 내부 문제로 치부

※ 국제적교류가 미미,지리적으로 먼 서방보다 인접국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

다. 미얀마의 地政學・地經학적 가치

1. 지정학 측면

가) 서남아와 동남아를 잇는 중요한 길목으로 중국·인도와 긴 국경선으로 인접

나) 동남아 대륙부에서 드물게 심해항구를 개발하기 좋은조건→대규모선박 접안가능

* 항공모함 or 대규모 에너지 수송 선박 운용 여건 양호

다) 중국, 미얀마 통해 말라카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 진출

* 중국 일대일로외 하나인 해양 '진주 목걸이 전략' 완성

라)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중요한 요충지

2. 지경학 측면

가) 국토의 50%가 산림으로 세계 티크 목재의 80%를 생산, 세계 루비생산의 99% 차지

나) 천연가스(매장량 23조m³), 구리(2100만t), 주석(100만t), 금(1.8만kg), 석탄(2억t) 매장 추정

* 현재 생산량은 극히 적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큼

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

※ 美・中 간 패권경쟁 고려시 미얀마의 地經學적 가치보다 地政學적 가치가 매우 높음

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미얀마의 가치

1. 미국, 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선의 강화의 전초 기지인 미얀마

가) 바이든, Quad(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를 중심으로 아태전략 전개

* 중국포위를 위해 트럼프의 Quad의 준군사동맹화 정책 계승 전망(최원기 외교연 교수, 2.3)

* Quad의 목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반접근/거부 전략, 일대일로 통한 대국화의 차단

나) 인도와 중국간의 국경분쟁을 활용한 중국의 인도양 침투 저지

다) 대만의 군사력 증강 지원, 남중국해 자유의 항행작전으로 중국의 남동진 저지

라) 미얀마의 親美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진주목걸이 전략)의 확대 차단

* 미얀마 에너지 및 각종 지하자원의 중국 수출 차단 및 중국의 최단거리 인도양 진입 차단

* 현 미얀마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 정부의 권력 장악으로 미국에 매우 불리

2. 중국, '진주 목걸이 전략'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의 공고화

가)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 인도양 접근로 ⇒ 미얀마 선택

* 파키스탄을 통한 접근보다 근거리에 위치하여 중국 해안에서의 육상·해상 접근 용이

나) 천연가스 등 미얀마로부터 에너지와 각종지하자원을 수입할 단거리 통로

다) 美 견제와 주변국 이해관계 얽힌 남중국해에 비해 미얀마 군부 설득으로 침투 해결

*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과 유사한 미얀마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본질적으로 유사

* 중국 '진주목걸이' 수송로 확보 위해 미얀마 군부 이권사업 지원

* 미국의 미얀마 제재카드에 미얀마군부는 급속히 중국으로 기울우려 상존

마) 미얀마는 인도-태평양 지역중심위치, 미국봉쇄전략을 단절할 수 있는 중앙지점

* 이번 쿠데타는 중국에게 일대일로의 공고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

VI. 전 망 및 결 론

1. 단기적으로 쿠데타는 성공하여 단기적으로 전국은 안정될 전망

가. 단기적 쿠데타를 뒤집을 유일한 세력은 군부인데 현재까지 군부내 反쿠데타 세력 부재

* '07년 이후 민주화도 군부에 의해 진압된 승려와 국민들의 시위로 인한 것이

라기 보다, 진압과정 유혈사태로 인한 미국 등 서방압력, 사이클론으로 인한 재난사태로 인한 것

⇒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없이는 민주화는 시위 동력이 매우 약함

나. 현재, 미얀마일부에서 SNS 통제 등이 있을 뿐 정치인 석방 등 국가 기능 정상적 작동

다. 미국의 新정부도 중국 봉쇄를 위한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음

* '60년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친 북한과 비슷한 상황

2.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의 對미얀마 제재의 실효성 의문

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얀마 제재 불가피

·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미얀마 군부와 타협 불가피

나. 미국의 제재가 있다고 해도 중국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음

*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얀마 군부와 밀착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

3. 미얀마 군부정권은 북한식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중국에게서 이권 획득 추구

가. 미국과 서방 대상, 중국과의 밀착을 레버리지로 군부정권의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획득

나. 권위주의라는 유사성을 가진 중국에게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미끼로 경제적 이익 추구

* 미얀마 쿠데타는 '07년과 같은 외부의 간섭이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기초로 실행됨

4. 장기적으로 미얀마와 주변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 가능

가. 정통성이 없는 군부정권에 의한 외국인 투자 등의 비약적 경제발전에 한계

⇒ 군부 부정부패가 심화로 경제발전이 문제될 경우 국민적인 불만에 의한 시위격화 전망

- *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매우 높으나 유럽 등 서방엔 회의적
- * 로힝야족 사태 등 미얀마의 인권적 행태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센 현실
- * 심지어 인도를 제외한 Quad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음

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개연성 높음

- * 등거리 외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경우 다른 쪽은 적으로 돌변

※ 이번 미얀마 쿠데타는 최근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사건으로 중국과의 패권경쟁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권력이

강해지는 현실주의 정치적 환경이 국제현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



(중국의 서남아시아 진주목걸이 전략)

※중국이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일컫는 말.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중국 컨설팅회사 부즈앨런해밀턴이 2005년 1월 미 국방부 의뢰로 작성한 '아시아에서의 에너지미래보고서'에서 사용한 말
중국은 중동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해로를 따라 전략적 관계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지키고, 광범위한 안보목적을 위해 방어적·공격적 입지를 구축하여 미국의 고립화 전략에 대응하는 방식

#2. 현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1. 과제목표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대비 ‘핵·WMD 대응체계’ 임기 내조기 구축추진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 주요내용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핵·WMD 대응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북한전역 전략타격능력,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 압도적 대응능력구축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중심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2.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1. 과제목표 -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2. 주요내용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가속화, 조기 전작권전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추진 -한미 정부차원 조기 전작권 전환에 합의, 한미국방 당국간 추진방향 합의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미간 전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한국군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필수 대응능력 확보
3.국방개혁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1. 과제목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강화 및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선 추진 2. 주요내용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수립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문민화 방안 추진 -군 사법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권 보장 -예비전력 정예화 /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통해 국방력강화 및 주민불편 해소

나.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4. 방산비리 척결과4차산업 혁명시대/방위 산업 육성	1. 과제목표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 향상 방안 모색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민·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인센티브 중심 방산 생태계를 조성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
5. 장병인권 보장/복무여건 획기적개선	1. 과제목표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예방 및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부상을 입은 장병이 치료를 선택 권리 보장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복무학점 인정 및 장병자기개발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의문사 진상 규명제도개선 -여군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 여군 임신·출산·육아지원 제도개선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병역 면탈 예방,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직업군인 맞춤형 주거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 공급방식 다변화
6.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 및 한반도평화체계 구축	1. 과제목표 -완전한 북핵폐기 목표로 북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2. 주요내용 - 북핵폐기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마련, 비핵화 초기조치 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균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대북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7. 한반도신 경제지도 구상 /경제통일구현	1. 과제목표 -남북 간 경험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현 2. 주요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험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남북한 하나의 시·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남북접경지역 발전)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통일 경제특구 지정·운영,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병, 재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추진 -보건의료·방역, 농어업 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
8. 남북기본협 정체결 / 남북 관계 재정립	1. 과제목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2. 주요내용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남북회담 체계화·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동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9.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국민협약 추진	1. 과제목표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소통·참여, 교육 등 유기적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역량 강화 2. 주요내용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모색 병행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 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10. 동북아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1. 과제목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2. 주요내용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1)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1)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1)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2)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한·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1)한러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

2.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1)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핵심)

가. 박정희 정부

-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배경: 국제적 대당트 분위기, 닉슨독트린 및 주한미군 철수 선언(1972 유신헌법 제정)
- 1973년 6.23 선언 -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7개항)
내정 불간섭,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호혜평등(互惠平等) 원칙 하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할슈타인 원칙' 탈피)
※ 북한은 한반도에 두 개 정부 인정, 분단 영구화라 비난, 남북대화 중단

나. 노태우 정부

-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97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91년 남북 UN동시 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1949년 UN 총회: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 1991년 남북 동시 UN가입으로 북한도 38도선 이북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UN 결의)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화해, 상호 불가침(군사적 신뢰, 군축, 군사공동위 설치), 교류 협력

다. 김대중 정부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남한의 연합제안,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1)연합제안 :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가 연합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2)연방제안 : 1국가 2체제 2정부
(3)화해와 교류 :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라. 노무현 정부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문 -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 지속, 상호존중과 신뢰관계, 경제협력사업 확대(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 군사적 적대 종식 : 긴장 완화, 평화 유지, 상호 불가침의무 인정,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합의 촉구
※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및 합의 이행 노력

마. 이명박 정부 - 기본정책 : 비핵개방 3000 “과거 기출문제”

-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 2009년 북한의 핵실험 → 미국 주도의 PSI 참여
- 2010년 초 : 천안함 사건 발생
→ 5.24 조치 :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북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대북지원 보류
- 2010년 말 : 연평도 포격, 남북관계 악화(극한의 대결)

마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2013년 개성공단 폐쇄
- 2014년 드레스덴 선언(2014.3.28.) -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 공동번영, 인프라구축
※ 북한은 남한 주도하 흡수통일하려는 대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
- 2015년 서해 NLL 도발, 목함지뢰 도발, 남북 고위급 회담 등
- 2016년 대북정책 : 개성공단폐쇄, 북핵에 대한 강경입장 고수(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 新베를린 평화구상

1. 문재인 대통령(후보자) 공약사항

- 1)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킬체인·KAMD 조기구축**
- 2) 감시·정찰·획득 능력 강화 3) 적 지휘부와 장사정포 마비 전력 증강
- 4)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임기내 반환추진
- 5)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
- 6) 단기 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 확대, 첨단정예군육성, **군복무기간 점진적18개월**
- 7) **동북아 평화선도 국가 역할추진**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목표

2. 남북간 갈등해결 방안 제시

- 1) 수자원 공동이용 및 임진강·한탄강 홍수 피해 방지
- 2) 산림자원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 / 해양자원 공동이용
- 3)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4)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의 참가 및 공동응원단 지원 약속**

3. 대통령 취임사분석 : 경제-평화 병행(한반도 균형자론, 운전자론 등)

- 1) 문재인 정부는 향후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본이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관심
- 2) 동북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획득유지
- 3) 노무현 정부를 계승, 4자 회담 혹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

4. 문재인대통령의 新베를린 평화구상(대북5대 원칙,정책기조)

- 1) 한반도 평화 만들기 2)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4)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 5) 정치군사 문제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분리

※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관련국(북,중,미)들과 한반도종전선언/다자평화협정 제안

5.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위한 4개 상호이익 사업추진(북한에 제안)

- 1) 10·4 정상선언 10주년기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상봉 / 남북한 고향(성묘) 방문
- 2)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 4) 남북대화 재개, 도발중단, 평화적 대화 등

★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북핵, 미사일-한미 군사훈련 동시 동결 하자는 **‘쌍 잡정’** 제안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 예정된 시나리오식 접근

※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한미훈련(폐지)→종전선언→평화협정**

제 3~6 교시

(13:30~16:50)

- # 3교시. 포괄적 안보위협 / 위협개념 및 유형
- # 4교시. 테러 및 사이버테러 / 지구온난화와 자연재난
- # 5교시. 비전통적 안보위협(핵심)
- # 6교시.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설명

논술시험 1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1 문 최근 이상적인 고온현상과 가뭄 등 국가안보에 기후변화가 글로벌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염병, 빈곤, 식량부족 등이 오늘날 또 다른 심각한 환경적 안보위협 요인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늘어나면서 군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적성국의 군대나 테러조직을 넘어 해수면 상승, 강력한 폭풍우와 광범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물음에 답하시오(총 20점)

- 1) 현대적 국가안보의 개념과 특징, 핵심적 유지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라. (7점)

- 2) 환경 안보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13점)

정답 및 해설

문제 1 논술핵심(요약)

1. 서 론
11. 현대적 국가안보 개념과 특징 및 핵심적 유지방안
1. 현대적 국가안보의 개념과 특징
 2. 국가안보 핵심적 유지방안
111. 환경 안보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환경안보의 개념
 2.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 IV. 결 언

1. 서 론

1. 문제 상황요약, 최근 북한위협 / 환경안보
2. 우리정부의 대응, 논술전개 순서
3. 환경안보적 측면에 간략한 대응전략 등 기술(요약)

11. 현대적 국가안보 개념과 특징 및 핵심적 유지방안

1. 현대적 국가안보의 개념과 특징

가. 국가안보 개념 정의

- 1) 국가안보란 핵심가치를 희생시킬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만약 도전을 받게 되면 해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핵심가치들을 보존시킬 정도로 안전한 것
- 2) 국가안보는 단지 방대한 군사력, 세부적인 동원계획, 전쟁에서의 승패의 의미

나. 안보개념의 특징

- 1)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문제 발생의 주요인, 대응책도 군사 중심 사고
- 2) 위협발생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가능
- 3) 탈냉전 후 국가의 보존가치 변화
 - * 일국적, 군사적, 국가 중심적 ⇒ 세계적, 비군사적, 사회적, 인간 중심적 가치
- 4) 보호대상의 다원화, 위협 근원의 다양화, 안보주체의 다차원화

2. 국가안보 핵심적 유지방안 (이론참고)

- | | | |
|-------------|-------------|---------|
| 1) 개별적 안전보장 | 2) 동맹 | 3) 집단방위 |
| 4) 집단안전보장 | 5) 다자간 안보협력 | 6) 중립 |

III. 환경 안보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환경안보 개념 : 모든 인류의 생존과 유지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유지

※ 유엔 개발 계획(UNDP)은 1994년 「인간 개발보고서」(HDR)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식량안보, 경제안보 및 환경안보를 인간안보의 한 요소로 제시

2.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가. 환경안보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 1)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 2) 극한기후로 인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기능 훼손
- 3) 식량과 물 부족 현상에 따른 분쟁과 기후난민 발생,
- 4) 생물 다양성과 열대림 파괴 등 자연환경 훼손
- 5) 기후변화에 따른 극물 수급 불균형이 영향

나. 우리나라의 환경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 1) 북한지역 산림이 황폐화되고 기상재해 예방 인프라가 취약
- 2) 북한에 가뭄과 수해가 반복되면 물 부족과 식량난이 가중
- 3) 기후난민 형태의 대량 탈북사태가 예상되고, 결국 우리나라 안보환경 영향
- 4) 중국과의 미세먼지, 조류독감 등 한반도특성고려 다양한 환경적갈등 요인

IV. 결 언 ◦ 앞의 내용 논고요약 / 자신의 주장언급 / 발전방향 제시 등

논술시험 2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2 문 최근 국내외에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어,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부합된 안보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와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 등 소위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핵무력완성위한 핵잠수함 개발과 신형 SLBM 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5점)

- 1) 현대적인 국가안보개념과 국가안보 정책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점)

- 2)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안보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시오.(7점)

문제2) 국가안보개념 변화와 우리나라 안보정책 수립방향

정답 및 해설

문제 2 논술핵심(요약)

I. 서 론

가. 문제 상황요약, 최근 북한위협 나. 우리나라 안보정책 및 논술전개 순서

II. 본 론

가. 국가안보 개념변화와 우리나라 안보정책

1. 탈냉전 이후의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2. 포괄적 안보개념 및 배경

나. 국가안보정책의 유형과 우리나라 안보위협

1. 국가안보정책 유형 2. 우리나라 안보위협

다. 우리나라 안보정책 수립방향

III. 결 언

가. 미래지향적 안보정책 수립방향과 우리의 대응

1. 서 론

가. 최근 안보상황 및 우리나라 안보정책

나. 논술전개순서 및 방향, 국가안보 변화 등 기술

II. 본 론

가. 국가안보 개념변화와 우리나라 안보정책

1. 탈냉전 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가)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 등 전통적 안보위협은 감소

나) 비전통 안보위협 증가 및 초국가적 위협,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

다)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2. 포괄적 안보개념 및 배경

가) 탈냉전 후 국가의 보존가치 변화

※ 일국적, 군사적, 국가 중심적 ⇒ 세계적, 비군사적, 사회적, 인간 중심적 가치

나) 포괄적 안보 :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 인간안보 위협 등 다차원의 위협 대응

나. 국가안보정책의 유형과 우리나라 안보위협

1. 국가안보정책 유형

가) 절대안보 : 절대안보란 어떤 국가가 독자적으로나 고립적으로 군사적인 자력방위

달성함으로써 또는 다른 국가와 세력균형을 위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장받는 것

나) 중립안보 : 어떤 국가가 중립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중립 보장 국가들로부터
중립국가에 대한 불가침의 안전보장을 획득

다) 협력안보 : 정치·외교적 현실에 기초해 안보수단으로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정
하면서, 동맹국가는 물론 적대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대화와 공존을 추구
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정책

라) 집단안보: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하는
공동노력으로써, 한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를 다른 나머지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
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나를 위해 전체가 있고 전체를 위해 하나가 존재한다는
안보정책

다. 우리나라 안보정책 수립방향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극지도발 위협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화생무기,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유사한 형태의 극지도발

2. 영토 및 해양관할권 분쟁

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과 이어도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문제

나) 북한은 NLL을 서해해상분계선으로 미인정, 분쟁지역화 책동 상존

3. 동북아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 심화

가) 미국 : 스텔스 전투기/핵잠수함의 정찰감시, 한국에 사드 및 중장거리 전술미사일 배치

나) 중국 : 항공모함 진수, 북중 국경지역 대규모 군사훈련,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드보복

다) 일본 : 역사왜곡 지속,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 경제보복, 독도문제 등

4. 기타 : 금융위기 등 경제안보위협, 사이버테러 위협, 자원안보 위협, 국제범죄, IS 등

III. 결 론

가. 한국의 안보정책 수립방향 및 맺음말

1.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안보 위협 동시대비 포괄적 안보전략 필요.

2. 힘에 의한 안보전략과 협력에 의한 안보전략 등 다차원적인 안보정책

3. 한미동맹 발전 및 중국과 안보협력 강화 * 동맹안보 딜레마 극복

4. 북핵 위기 해결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이를 위한 실질적 안보태세 구축

논술 모의시험(3번)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3 문. 북한이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까지 침투하는 등 전방위 해킹을 하고 있으며,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3명은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벌인 혐의와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가 넘는 돈을 빼가려는가 하면,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 등에서는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 공격 활동은 최첨단 수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우리정부의 효율적인 대비방향에 대하여 논하라.(7점)
- 2) 사이버테러 위기관리 단계를 적용한 효율적 대비방안에 대해서 논하라(8점)

논술문제 정답(1)

1. 서론

- 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실태와 우리정부의 취약성
- 나) 코로나19백신해킹 및 북한의 사이버테러 양상과 위협 등

11.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대비방향

가. 사이버공격 유형

1.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공격(DoS) 다수의 컴퓨터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방식

2.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파괴하도록 특수하게 개발된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와같은 악성 프로그램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외에도 웜, 트로이목마 등이 있으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라고 표기

* 스텝스넷 : 발전소·공항·철도 등 기간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작된 컴퓨터바이러스

3. 웜(Worm)

웜은 네트워크(메일)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여 감염시키고, 웜은 단순히 자기복제 기능만으로도 막대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피해를 야기한다

4. 해킹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이나 설정의 오류를 이용하여 보안침해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시스템 내의 자료 위조, 변조, 제하거나 이상 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5. GPS교란

12년 북한추정소행 GPS 교란으로 항공기대란과 수도권, 강원권 항법장치 교란으로 최근 북한의 좀더 정교한 형태의 GPS교란 전파 발사(해주, 금강산 등) 수도권, 경기, 강원권 항공기 이착륙, 함정, 차량 등 위성항법장치 오류, 신호교란공격을 수행한다

6.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대상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스피어피싱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과 달리 특정 대상을 목표로 공격수법이다. 특정 온라인몰(인터파크) 회원 자료유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예금 인출 등 사례가 있다.

7. 랜섬웨어(ransomware)

갑자기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볼수 없는 '크립토락터(CryptoLocker)' 바이러스에 감염돼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 된 것으로, 05년부터 본격 알려지기 시작해, 13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였고, 랜섬웨어 공격받은 기관, 기업, 개인 PC 등 증가하는 추세임

나.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리나라 대비방향

1. 사이버테러 공격시 적극대응전략 (공격과 방어를동시) 적극적/지속적 대응
2. 컨트롤 타워일원화(국정원/청와대) / 사이버 전문가 육성지원
3.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제정(현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적용)
4. 인재양성/국제적 공조노력(정부, 민간) / 대국민 사이버 안보의식 향상
5. 사이버전 훈련장, 전문인력 양성 / 내부망 공격에도 대비책 강구

III. 사이버테러 위기관리 단계를 적용한 효율적 대비방안

가.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1) 국가기관의 예방활동

- 가)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 지도 및 감독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책수립 지시
- 나) 국정원장은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작성 배포, 시행여부 확인

2) 대비활동

- 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설치 운영
- 나) 보안관제센터 운용의 장은 필요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업무 수행 가능,
사이버공격 첩보를 국정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
- 다)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 중앙행정기관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국정원장은 통합훈련 실시 가능하며, 훈련 후 시정조치 요구

3) 대응활동

- 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발령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 시 즉시 국정원장에게 통보
- 다) 국정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 시 사고조사(합동조사팀) 및 처리

4) 복구활동

- 가) 사이버공격 피해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즉시 국정원장에게 통보
- 나) 국정원은 징후발견 또는 사고 접수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
- 다) 국정원장은 피해 원인 분석, 범죄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

5) 연구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예산 확보 등

IV. 결 론

- 가) 논고정리 , 발전방향 요약제시, 고사성어, 기대효과